

광주·전남발전연구 분리

박시장-박지사 합의...운영비 중복·갈등 유발 반대론 고조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 행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던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하 광전연)을 분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광전연의 분리 운영은 연구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운영경비 중복 투입, 지자체간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관련기사 3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5일 광주시장에서 만나 연구원 분리 운영 방침에 합의하고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또 시·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광주·전남 교통연수원도 분리하기로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7일 "최근 광주와 전남의 행정특성이 크게 달라져 공동 운영의 명분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 연구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시·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분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제일 광전연 원장도 지난 5일 회동에서 시·도 지사가 분리 운영에 합

의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모임에서 시·도지사는 오 원장에게 공동운영 중인 연구원의 예산과 기획분야의 분리를 준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2일자로 부임해 잔여 임기 2년을 남겨놓고 있는 오 원장은 7일 통화에서 "시·도 지사의 분리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시·도의 분리운영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경우 광전연은 이르면 연내에 분리철차를 마치고 시·도별로 독자 운영될 전망이다. 연구원 분리운영론은 광역 도시행정 및 자동차, 관광산업, 문화수도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광주시와 농수산·해양 관광문화와 최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 사업(J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의 행정 특성이 크게 달라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돼 왔다. 이같은 실정에서 지난 5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만나 운영형태 변경에 합의함으로써 연구원 분리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도가 독자적인 연구원 운영시 ▲지역이거주의 논리 극대화

에 따른 시·도 갈등 유발 ▲운영 경비 중복 투입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이 예견돼 분리 반대론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이 연구원을 따로 운영하면 지역 이거주의에 따른 논리 개발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지역연구 관련 지식정보와 노하우 및 연구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연구인력 30명 규모 연구원의 경우 독자 운영비가 최소 연 40억원이 필요한 실정에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광주·전남이 이를 감당하려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1년 태동한 광전연은 연구직 13명과 일반직 10명 등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광주시·5개 자치구와 전남도·22개 시군 및 금융기관·상공회의 출신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방인 아닌 당당한 동반자로”

광주·전남 이주여성 급증세...‘다인종 사회’ 의식 전환을

▶기획시리즈 14편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광주·전남의 농어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이주여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책 외에 우리 사회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여성을 항상 이방인으로 보고 이들을 '도와주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이주여성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에선 3명 중 1명 이상이 중국이나 동남아국가 등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택하는 추세다. 이주여성 숫자는 지난해 말까지 광주에 626명, 전남에 3천171명이나 된다.

하지만 광주·전남에 정착한 대다수 이주여성들은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뿌리깊은 순혈주의, 보수적인 편견의 장벽에 둘러싸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무조건적 적응을 강요당해왔다. 그들의 절망과 고통은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게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대책 또한 갈음마수준이다.



이주여성들이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폐쇄성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말 광주 이주여성 상담센터가 마련한 송년회에 6개월된 딸을 안고 참석한 베트남 출신 흥풍(22)씨가 시어머니와 담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에 광주일보는 전남대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과 공동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살이를 진단해 보는 심층 기획을 마련했다.

기존 이주여성 당사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부정적이고 온정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그 자녀와 남

편, 가족에 대한 통계분석과 실태조사, 심층 면접을 통해 실상을 점검하고 그들이 당당한 한국인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공존의 대안을 모색해보자 한다. '열린 다문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심층기획에 함께 참여하는 전남

대 박해광 교수(사회학)는 “광주·전남은 이제 다인종사회로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부터 인류 보편성·합리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與 신당과+민주+국민중심당 의원들

교섭단체 구성키로

열린우리당 신당과 의원들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의원들 일부가 통합신당 창당을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선도탈당 의지를 밝힌 열린우리당 연동연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갖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

련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전 단계로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 원내의 인사들은 물론 열린우리당 일부 신당과 의원들과 국민중심당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특히 연동연 의원과는 5일 깊은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연동연 의원도 “김 원내대표와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 의원은 또 “법원의 당헌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 등 여러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 있어 확신

하기는 어렵지만 교섭단체 구성은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힌 뒤 “조만간 구체적인 문제는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법원이 열린우리당 사수파의 '기초당원제'에 대한 당헌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연동연 의원을 선두로 10여명의 여당의원 탈당이 이뤄진다면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교섭단체 구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구속영장

신상식 전 광주지원장도...금감원 전격 압수수색

김흥주(58·구속기소)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7일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와 업무 서류철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작업을

별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김흥주씨의 금융기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역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신상식(55·H캐피탈 감사)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후원대학 장학 58년 역사상 최장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800-4
세게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 상담전화 062-9531 ▶ T.061-360-5000

ALL LASH MASCARA

LANEIGE

LANEIGE

한글서체

LANEIGE